



코로나와 기후재난시대, 어떤 ‘그린뉴딜’이 필요한가?

일시 : 5월 27일 (수) 오후 2시-5시
장소 :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
주최 :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 일시: 2020년 5월 27일 (수) 오후 2-5시
- 장소: 명동 유네스코 회관
-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 방식: 오프라인 토론회 & 인터넷 중계 예정

사회: 기후위기비상행동 한재각 공동운영위원장

인사말 및 안내

14:00~14:10	인사말, 토론회 안내	사회자
-------------	-------------	-----

1부 기조 및 부문 발제

14:10~14:40	기조 발제: 코로나와 기후재난 시대, 그린뉴딜의 원칙과 방향	김선철(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14:40~14:50	부문 발제1: 노동자의 삶을 위한 그린뉴딜	양동규 (민주노총)
14:50~15:00	부문 발제2: 농민의 삶을 위한 그린뉴딜	진주 (기후위기 비상행동 농업.먹거리 모임)
15:00~15:10	부문 발제3: 여성의 삶을 위한 그린뉴딜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15:10~15:20	부문 발제4: 청년의 삶을 위한 그린뉴딜	이두원(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15:20~15:30	휴식	

2부 지정 토론

15:30~16:10	고재경 (경기연구원)
	김상현 (한양대학교)
	박기용 (한겨레 기후변화팀)
	김소영 (성대골 마을닷살림협동조합)

3부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6:10~17:00

기후재난 시대, 그린뉴딜의 원칙: 정의로운 그린뉴딜¹⁾

기후위기비상행동 토론회 / 2020-05-27

코로나와 기후재난시대, 어떤 '그린뉴딜'이 필요한가?

김선철·한재각(기후위기 비상행동)

1. 코로나19 재난, 그리고 기후위기의 위협

코로나19의 위협이 전세계와 한국을 덮치고 있다. 성공적인 방역의 사례로 꼽히는 한국에서도 11,200명이 넘는 확진자와 26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전세계적으로는 550만이 넘는 확진과 35만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위협은 감염과 사망에만 있지 않다. 지난 4월 시작된 록다운(lockdown)으로 미국에서만 지난 두 달 6000만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발생했고 ILO에 따르면 전세계 비공식 경제부문에 고용된 약 16억명, 혹은 절반 가량의 노동 인구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이미 존재하는 성차별을 악화시켜 여성 들은 가장 먼저 실업과 해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집에서는 점증하는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세계 55개국 1억3500명이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는 식량농업기구가 식량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라 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4월 취업자 감소는 102만명으로 이는 2008년 전세계를 덮친 금융위기 때의 25만명 감소는 물론 IMF위기 첫 두 달 취업자 감소 92만명보다 더 큰 숫자이다. 일시 휴직자 약 150여만명까지 더하면 약 250만명이 일자리가 없는 상태인데, 이들의 다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특히 서비스 산업의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이다. 여기에 더해 유동 인구 감소와 개학 연기, 온라인 강의 등으로 인해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통상적인 경제활동은 멈춰졌고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19 재난은 우연하게 일어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재해, 즉 '인재(人災)'다. 코로나19는 사스, 메르스, 각종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동물에 있던 무해한 미생물이 인간에게 옮겨와 유해한 병원균으로 변이가 된 인수공통감염병인데, 이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은 인간의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와 개발의 결과 인간과 동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1) 이 발표문은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회의 토론을 반영한 것이지만, 비상행동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그 빈도도 늘어나고 있다. 기후변화는 감염병의 영향력을 더 확산시키는데, 2018년 IPCC 특별 보고서는 지구 온도가 1.5도만 상승해도 말라리아나 뎅기열과 같은 감염병을 증가시켜 인간의 생존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산업혁명 기준 세계 평균 기온상승이 0.9도인데 반해 한국의 기온상승은 20세기 초에 비해 1.4도 올랐는데, 그 결과 한국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말라리아가 다시 발견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기후변화가 감염병을 증가시키는데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IPCC 특별보고서 등 많은 연구들은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가 되돌릴 수 없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 뿐 아니라 태풍과 기근, 고온 현상, 해수면 상승, 산불 증가를 촉진함으로써 인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과 먹거리를 감소시키고 일상적 경제활동도 저해함을, 그리고 이로 인한 대규모 인구이동(=난민사태)과 사회적/국가간 갈등을 증대시킬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조천호 박사의 말을 조금 비틀어 표현하자면, 코로나19 재난이 지뢰를 밟는 거라면 기후위기는 핵폭탄인 셈이다.

2. 코로나19의 맥락에서 본 그린뉴딜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때에 맞이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문명사적 전환에 대한 성찰과 오늘날 지배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은 사회적으로나, 기후환경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번지고 있다. 유럽과 북미의 선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대공황 이후 최고의 위기라는 인식 하에 전에 없던 액수의 공공 재정과 투자 정책을 실행/계획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공적 투자 방식과는 달리 시민/노동자에 대한 직접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의 경우 노동과 기후 문제 관련 조건을 붙이는 것이 적극 논의/실천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에서조차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타개를 위해 미화 2180억 달러가 넘는 재정(한화 약 270조원)을 풀어 일인당 1200불(한화 약 150만원)의 재난 기금을 지급했고, 이에 더해 최대 4달까지 매주 600불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2.18조 달러(한화 약 2700조원)와 소상공인들의 고용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300억 달러(한화 약 37조원)를 추가 배정했다.

코로나19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 새로운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북미와 유럽에 비해 한국의 코로나19 위기 인식은 약한 편이다.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일상 활동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방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평으로 인해 민족주의적 자긍심이 고무되었고, 그 결과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돌봄 및 사회서비스 체계, 비정규직 문제 등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고스란히 드

러났다. 이에 따라 버려야 할 'old'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new'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민사회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그린뉴딜의 문제의식과 넓은 접점을 찾을 수 있다.

3. 그린뉴딜은 무엇인가?

2018년 말부터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논의가 활성화된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적 양극화가 동일한 원인, 즉 현 경제 시스템의 실패로부터 유래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이 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지적, 기술적 대책이 아닌 사회, 경제, 정치의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의 한 켠에는 2018년 10월에 나온 IPCC 1.5도 특별보고서가 있다. 보고서는 지구 온도가 섭씨 1.5도와 2도 올라갔을 각각의 경우를 가정해 그 영향을 비교했는데, 2도 올라갔을 경우의 기후변화가 생태계와 인류에 미치는 악영향이 1.5도 상승했을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1.5도 내로 지구 기온의 상승을 막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파리기후협약에서 합의된 수준을 넘어서는 보다 급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은 지금까지의 기후위기 대응이 실패했다는 많은 연구결과와 결합되며 1.5도로 지구 기온 상승을 막을 새로운 대안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게 되었다.

끝 모를 불평등의 심화와 이에 대한 근본적 변화의 요구는 그린뉴딜 등장의 또 다른 배경을 이룬다. 2018년 세계 불평등 리포트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상위 1%의 수입은 1980년 전체 소득의 10%에서 2016년 20%로 두 배 증가했으나 하위 50%는 같은 기간 20%에서 13%로 소득이 감소했다.²⁾ 빈곤문제를 다루는 옥스팜에 따르면, 1988년과 2011년 사이 전세계 상위 1%의 소득증가율이 하위 50%의 소득증가율의 182배에 이르렀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8명과 하위 50%의 인류가 동일한 부를 소유하고 있다.³⁾ 또 다른 옥스팜 자료는 전세계 상위 1%가 2017년 한 해 동안 새로 창출된 부의 82%를 독식했음을 보고 했다.⁴⁾ 불평등이 심화되는 맥락에서 2016년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켰고, 2018년에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를 비롯한 여러 급진주의자들이 미국 의회에 진입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그린뉴딜이 제기되었다. (오카시오-코르테스와 에드 마키가 의회에 제출한 그린뉴딜안은 별첨1 참고)

이런 맥락에서 최근 논의되는 그린뉴딜은 과거 오바마 시절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잠시 언급

2) <https://wir2018.wid.world/download.html>

3) https://www-cdn.oxfam.org/s3fs-public/file_attachments/bp-economy-for-99-percent-160117-en.pdf

4) <https://www.oxfam.org/en/press-releases/richest-1-percent-bagged-82-percent-wealth-created-last-year-poorest-half-humanity>

5) 불평등 문제 전문가인 김낙년 교수에 따르면 한국도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3%를 차지하는 소득 집중도를 보여주는데, 이는 OECD 국가들 중 칠레, 터키,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51575720694>

되었던 그린뉴딜과는 맥을 달리 한다. 과거의 그린뉴딜이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체제 안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한 녹색전환을 모색한 것이었다면, 2018년 이후 그린뉴딜은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에 기반해 사회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민중 지향적 기후정의운동’의 모습을 강하게 띤다. 실제로 현재까지 ‘그린뉴딜’의 이름을 달고 나온 정책은 미국의 오카시오-콜테스와 마키의 안과 이를 물려받은 샌더스의 안, 영국 노동당내 그린뉴딜 그룹의 안, 그리고 유럽연합의 ‘그린딜’을 비판하는 유럽 DiEM25의 안, 그리고 여러 나라의 녹색당에서 추진하는 안 등이 존재한다. (샌더스와 노동당의 그린뉴딜은 각각 별첨 2와 3 참고) 이들 그린뉴딜은 공통적으로 기후위기와 경제적 양극화가 동일한 원인, 즉 현 경제 시스템의 실패로부터 유래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이 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지적, 기술적 대책이 아닌 사회, 경제, 정치의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유력한 조 바이든 후보의 ‘그린혁명’, 유럽연합의 ‘그린딜’, 독일의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등의 정책은 현재의 경제 질서 안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 전환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들은 굳이 ‘그린뉴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린뉴딜이 이미 급진적인 기후정의 프로젝트를 표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조합주의가 확립되어 노동조합이나 기후환경단체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유럽의 경우 이러한 정책에 대한 지지는 상당하지만, 그렇지 못한 미국의 경우, 썬라이즈 무브먼트 등 기후정의운동 세력은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바이든의 정책에 대해 반감이 무척 큰 상황이다.

이렇듯 해외 논의에서 ‘그린뉴딜’은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불평등 해소를 추구하려는 대안으로 다른 기후정책들과는 다른 의미 정립이 이루어진 반면, 한국에서는 모든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이 ‘그린뉴딜’로 포장되어 소개되는 가운데 그린뉴딜의 지향과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 보다는 그린뉴딜의 ‘브랜드화’가 가속화되는 형국이다.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뉴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4. 정부여당의 ‘그린뉴딜’ 논의 경과 및 평가

- 3/16 ‘탄소제로사회 그린뉴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약속’ 정책 발표, ‘2050년 탄소제로 사회’ 언급했으나 구체적 탄소배출 저감 목표도 계획도 제시되지 못함.
- 4/22 문 대통령,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 의사 발표.
- 5/7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 발표.

- 5/13 문 대통령, 환경부, 산자부, 중기부, 국토부에 그린뉴딜 관련 보고서 요청.
- 5/20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 포함하기로 발표.

정부여당 차원에서 ‘그린뉴딜’이 처음 공개적으로 제안된 것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6일, ‘탄소제로사회 그린뉴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총선 공약을 통해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을 통해 ‘2050년 탄소제로 사회’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이에 따른 구체적 탄소배출 저감 목표나 경로도 제시되지 못한 공약이었기에 비상행동도 “실망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그린뉴딜 공약, 여전히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비판 논평을 내기도 했다.⁶⁾ 총선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화되던 4월말,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과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보였고, 보름 후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에 온실가스 감축의 과제가 빠졌다는 비판이 일자 대통령은 5월 13일 각료들과의 비공개 토론에서 ‘그린뉴딜이 요즘 화두’라며 일자리 창출과 ‘외교적 접근’의 필요성을 근거로 삼아 환경부, 산자부, 중기부, 국토부에 그린뉴딜 관련 보고서를 요청하게 되었고, 일주일 후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그린뉴딜’을 채택하게 된 문제의식에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요구되는 철학이나 비전은 보이지 않았다. 5월 20일 ‘그린뉴딜’ 채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기자가 그린뉴딜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의] 대규모 토목 공사와는 다르지만 ‘녹색성장’을 “지금 시대에 맞게 강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이 4개 부처 장관에게 ‘그린뉴딜’ 보고서를 요청한 다음 날 비상행동이 났던 “문 대통령의 그린뉴딜 주문, 배출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결이 빠졌다”라는 제목의 논평은 이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⁷⁾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채택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성공적인 코로나19 ‘K-방역’을 통해 개선된 대외 이미지의 여세를 몰아 ‘기후악당국’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은 대통령이 4개 부처 장관에게 ‘그린뉴딜’ 보고서를 요청할 때 “국제사회가 그린뉴딜에 대한 한국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외교적 접근”을 언급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올해까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탄소저감 대책(NDC와 LEDS)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조건에서 더 이상 녹색전환의 과제를 미룰 수 없었던 점도 작용

6) <http://climate-strike.kr/2236/>

7) <http://climate-strike.kr/2317/>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환의 문제의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강한 동기와 맞물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후 기후위기 대처와 코로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방침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이 비상행동이 추구하는 기후정의의 원칙에 맞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여전히 탄소배출 제로의 구체적인 목표와 경로도 제시되지 못한 상황인데다 얼마 전 문 대통령이 부처 간 회의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요구를 일축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정부의 ‘그린뉴딜’이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회불평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원 등 막대한 지원을 쉽게 약속했던 반면 재난기금 지급이나 고용보험 확대 관련해서는 발을 질질 끄는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후위기 대응이 있어도 최소치로 맞출 가능성이 크고 코로나19 경제난과 불평등 극복도 ‘착한 임대업자’ 지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 지원 중심으로 GDP 성장률 제고와 낙수효과에 기댄 재분배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정부가 ‘그린뉴딜’을 수용한 것 자체가 기후운동의 성공을 반영하며 이제부터라도 그린뉴딜의 내용을 채워나가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그린뉴딜’은 결국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조적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경기부양을 위한 녹색전환’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기후정의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5.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의 그린뉴딜 논의 평가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은 정부보다 더 일찍 그린뉴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의 조직적 확산 과정에서 논의를 진행해왔던 국외 사례들과는 달리 ‘상층’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것도 주로 ‘민관협력’의 공간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다 보니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었으나 이 관심은 기층 대중조직이나 사회운동과는 괴리될 수밖에 없었고, 그린뉴딜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논의도 사회운동성을 잃은 채 ‘가능한 정치의 영역’에서 어떻게 정책화 시킬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 아래로부터의 그린뉴딜 요구는 없는 조건에서 정당, 지자체, 정부가 ‘그린뉴딜’을 먼저 들고 나오는 현상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여타 운동단체 활동가들의 임무 방기에 대한 지적과 반성이 필요하다.)

‘아래’가 조직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층에서 정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상황에서 ‘그린뉴딜’은 마치 ‘만병통치약’과도 같은 담론 효과를 내며 이것저것 무엇이든 그린뉴딜 정책으로 수렴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측면이 강하다. 그 결과 그린뉴딜은—강력한 중앙 정부의 강력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전제하고 산업구조와 사회경제체제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변화를 수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지자체 차원의 ‘그린뉴딜’이나 ‘농어촌 그린뉴딜’과 같은 방식으로 ‘세속화’되기도 했다. 총선 시기 어느 환경단체가 여야 후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5%가 당선 후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는데, 이런 결과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총선 시기 발표된 정의당과 녹색당의 그린뉴딜 정책은 본격적으로 ‘그린뉴딜’이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두 당의 그린뉴딜은 구체적인 탈탄소 목표(2050년 배출제로)와 탈석탄 등의 방법, 큰 틀에서나마 순환경제 등 새로운 경제체제의 상, 전환기 산업재편과 고용 계획, 재원 마련 계획, 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한국을 넘어서는 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고민하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당의 그린뉴딜 정책은 각각 별첨 4와 5 참고). 특히 녹색당은 기후위기대응과 더불어 전 산업에 걸친 보다 적극적인 불평등 해소 대책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당의 그린뉴딜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등 당사자들의 삶의 경험에 바탕한 참여는 약했고, 이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도 에너지 전환 시기 ‘고용전환’이나 ‘지원’ 등의 수동적, 시혜적 성격이 강한 측면을 드러냈다.

6. 정의로운 그린뉴딜의 목표, 원칙, 수단 및 과제

이상의 논의에 근거해 정부의 ‘그린뉴딜’이 보다 기후위기와 사회 불평등의 올바른 해결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국회, 정부 내에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에 기반한 그린뉴딜의 목표와 원칙, 방법론에 대한 토론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그린뉴딜’을 제안한다. 정의로운 그린뉴딜의 목표, 원칙, 수단 및 과제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라는 이름에서 내재된 세 가지 문제의식으로부터 도출된다.

- **그린(green):**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배출 제로 달성 및 생태계의 보존 및 복원의 문제의식.
- **뉴(new):** 회색 성장주의에 기반한 불평등한 사회경제체제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기에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새로운 사회상을 그려야 한다는 문제의식.
- **딜(deal):** 정책 결정은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여러 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이

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

□ 정의로운 그린뉴딜의 목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배출 제로 달성과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다.

□ 정의로운 그린뉴딜의 원칙

1) 구조적 변화의 원칙

현재의 사회경제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의 일부 개선이 아닌 구조적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칙. 특히 에너지 다소비 산업 시스템의 축소와 전환이 필요하다.

2) 파리협정 전문에 명시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가. 기후정의: 기후위기에 책임이 가장 작은 사회집단이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는 부정의(injustice)는 없어야 한다는, 따라서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많은 집단이 전환 과정에서도 가장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원칙.

나. 정의로운 전환: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여성, 청년,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당사자성에 입각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세부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I. 공공성: 공공투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교통, 주거, 교육, 의료, 에너지 부문 등에서 다양한 방식의 공적 소유 확장.

ii. 민주성: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성, 다양한 당사자들의 참여 통한 정책 결정, 취약층의 역량 강화(empowerment)를 위한 대책.

iii. 보편적 권리성: 정책상의 차별과 배제 극복 및 공공재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 시혜 아닌 보편적 권리의 문제로 인식 전환.

□ 정의로운 그린뉴딜의 수단

- 1)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자: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공공교통, 공공의료 등.
- 2) 기업 및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 공적 자금 지원시 기후/노동 조건 명시, 신규 석탄 발전소 중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중단,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지의 조속한 시행과 강화 등.
- 3) 노동자(특히 비정규직), 농민, 지역주민,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청년 등에 대한 역량 강화: 노동권 보장 확대 위한 노동관계법 정비,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농민)기본수당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 등.

□ 정의로운 그린뉴딜 재원 마련

시민에게 (불평등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기후정의 원칙에 따른 재정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외 탄소세, 화석연료 기업 과세, 부유세 등의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조건에서 정의로운 부담 원칙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과 개인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조세 및 부담금에 의한 재정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통해 조성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의 전환은 필수적이며 지방정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개발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재원 역시 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돌려야 한다(기후위기비상행동 26대 총선 세부 정책안의 해당 부분의 발췌 및 보완).

□ 정의로운 그린뉴딜의 7대 핵심과제 제안

첫째, 지구온도 상승 1.5도 제한 목표를 제시한 IPCC 권고에 따라 탄소예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2050년 이전에 배출제로에 도달해야 하며, 2030년에는 2억 1천만 톤 이하로 온실가스 배출해야 함. 이를 위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추진해야 하며, 대규모 재정투자, 기존 체제의 해체를 위한 규제 강화, 민주적·전환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 건물 및 산업 공정의 에너지효율화, 친환경 대중교통, 친환경 농업, 자원순환, 생태계 보존, 사회서비스 등을 위해서 대규모 재정투자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서 괜찮은 녹색 일자리의 창출과 함께 에너지, 교통, 농산물 유통, 돌봄 등의 필수적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유, 운영, 관리의 공공성과 민주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빈번해질 감염병과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구호체제 및 공공의료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공공병원의 확충 등의 물리적 인프라 확대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소방, 물류, 돌봄, 교육, 산업안전 등의 필수 노동자의 고용 확대와 노동조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성별 노동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넷째,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고 있는, 석탄발전, 철강, 자동차, 시멘트, 석유화학, 항공 등의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산업 축소 및 전환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빠른 기간 안에 모든 석탄발전소의 폐지, 내연기관차의 조속한 생산 금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산업전환 과정은 해당 산업의 노동자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며, 필요한 비용은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분담하고 피해 노동자와 주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다섯째, 배출제로를 위한 구조적 변화에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공평한 참여와 기여가 있어야 하며, 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시간의 단축,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농업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농민수당,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의 모든 이들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 정부와 지역사회의 전환 역량을 강화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역분권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여섯째, 코로나19 재난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명확한 방향과 조건이 부여되어야 한다. 대기업에 앞서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신속히 긴급 구제해야 한다. 또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고용 유지와 이익 공유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의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항공 및 전력 산업 등을 포함한 40조원 규모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정부의 녹색뉴딜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삼척블루파워를 비롯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신규 공항 건설 중단
- 두산중공업 지원의 고용 유지 및 기후보호 조건 부여

* 그 외의 세부적인 과제는 별첨 7. 기후위기비상행동 26대 세부 정책안을 참고

[별첨 1] 미국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테스와 에드 마키의 그린뉴딜 결의안(2019년 2월)

<연방정부가 그린뉴딜을 만들어나갈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의회 결의안 제안>

개요

- 맥락과 취지: 하원에서는 AOC가 상원에서는 에드 마키가 발의한 이 결의안은 정책 법안의 성격이 아닌 이런 문제들을 인지하고 연방정부가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의회를 통해 표현하자는 문제의식에서 나옴.
- 목표: 모든 커뮤니티와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넷제로 온실가스 배출로 가기 위한 연방정부의 의무로 그린뉴딜 제안. 온실가스 증대에 따른 기후위기와 임금정체 등으로 극대화된 사회불평등의 맥락에서 이 둘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 구성: 5대 목표, 14개의 프로젝트, 이들의 실행 원칙과 15개의 충족조건(requirement) 등 그린뉴딜의 문제의식과 목표, 정책방향과 원칙을 담음.
- 특징: 그린뉴딜의 문제의식과 목표, 정책방향과 원칙이 철저하게 원주민, 유색인 및 이주자 커뮤니티, 탈산업화 및 탈인구 커뮤니티, 빈곤층, 저임금 노동자, 여성, 노인, 무주택자 등 “최전선 커뮤니티(frontline communities)”의 조직력 정치력 경제력 강화를 중심으로 제시.

5대 목표

- 모든 커뮤니티와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넷제로 달성
- 모든 미국인들의 번영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수백만의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 창출
- 21세기의 도전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응대하기 위해 인프라와 산업에 투자
- 이후 세대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을 위해 깨끗한 공기와 물, 기후와 커뮤니티 활력, 건강한 먹거리, 자연에 대한 접근, 지속가능한 환경을 확보
- 오늘날 존재하는, 미래에 있을지 모를, 그리고 과거에 존재했던 원주민, 유색 커뮤니티, 이주자 커뮤니티, 탈산업화 커뮤니티, 인구감소하는 시골 커뮤니티, 빈곤층, 저임금 노동자, 여성, 노인, 무주택자, 장애인과 청년층(이후 이들을 최전선 약자 커뮤니티라 일컬음) 등에 대한 역사적 억압을 멈추기, 방지하기, 그리고 과거의 부정의 바로잡기.

5대 목표 달성 위한 14대 프로젝트 (향후 10년간 추진)

-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 대처 위한 기금마련과 커뮤니티에서 요구하는 자발적 프로젝트와 전략에 투자
- 미국의 인프라를 고치고 업그레이드하기
 -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공해와 온실가스 없애기
 - 깨끗한 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에 대한 사회적 리스크 감소

- 인프라와 관련 의회가 고려하는 모든 법안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내용 포함할 것
- 깨끗하고 재생가능하며 탄소배출 없는 에너지원 통한 미국 에너지 수요 100% 공급
 재생에너지원의 극적인 확장과 업그레이딩
 새로운 에너지원 찾기
 -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전력망 구축과 값싼 전기에 대한 모두의 접근권 보장
 - 전기화를 통해 모든 건물과 새로 지어질 건물들이 최대치의 에너지 효율성, 상수 효율성, 안전, 적절 가격, 편리, 내구성 확보될 수 있도록 전기화 등을 통한 업그레이딩
 - 재생에너지 기반 제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통해 클린 제조업의 획기적 성장 촉진 및 기술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로 공해와 온실가스 배출 제거
 - 농업 부문에서 기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공해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농민 목장주들과 협력. 이를 위해
 [소규모] 가족 농업 지원
 토지의 유기성 증가시킬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토지 사용법에 투자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
 - 기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공해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통 시스템의 전환. 이를 위해 다음에 투자:
 배출제로 차량을 위한 인프라와 제조업
 깨끗하고 값 싸고 모두에게 접근가능한 공공교통
 고속 철도
 -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적 건강 및 경제적인 문제 감소와 관리 위해 커뮤니티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와 전략 지원
 - 토지 보존과 조림 등 탄소저장 증대시킬 수 있는 검증된 저기술 공법을 통해 대기중 온실가스와 공해 감소
 - 생태다양성 강화시키고 기후탄력(climate resiliency) 확보 위해 위협에 처한 생태시스템 강화
 - 유해폐기물 처리와 저발전된 유기지역에 대한 투자 통해 경제성장과 지속가능성 보장
 - 다른 온실가스 및 공해의 원천 찾아 제거하기 위한 해법 찾기
 - 기술, 전문성, 상품, 자금, 서비스 등의 국제교류 활성화 통해 미국이 기후행동의 리더가 되고 다른 나라들에서의 그린뉴딜 지원

그린뉴딜 실행 원칙

- “그린뉴딜은 최전선 약자 커뮤니티, 노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시민사회 단체들, 학계, 그리고 사측을 포함하는 투명하고 포괄적인(inclusive) 협의, 협력, 파트너십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린뉴딜 목표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requirements)

- 모든 투자에 대해 공공을 포함한 모든 파트너들의 적절한 소유권이나 이익이 보장되어야
- 연방정부는 다음의 수단에 근거해 배출의 모든 환경적 사회적 비용과 영향을 고려해야
 - 존재하는 법률
 -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
 - 최전선 약자 커뮤니티가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
- 모든 이들이 그린뉴딜 동원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전선 약자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춘 자원, 훈련, 양질의 교육 제공
- 재생에너지 기술과 산업의 발전 위한 R&D에 공적 투자
-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최전선 약자 커뮤니티와 탈산업화 커뮤니티에서의 지역 경제의 발전과 산업 다각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좋은 일자리 창출, 부 축적과 커뮤니티 소유권 구축,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익 확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투자
- 최전선 약자 커뮤니티와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에 의해 지역적 차원에서의 그린뉴딜 동원이 주도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프로세스 보장
- 그린뉴딜 동원을 통해 양질의 노동조합이 보장된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여 평균 임금, 지역 고용, 훈련과 진급의 기회 등을 보장
- 모든 일자리는 가족부양이 가능한 임금이어야 하며 가족/의료 휴가 및 유급휴가, 퇴직 이후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 어떠한 강제, 위협, 협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조건에서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행동하고 교섭할 수 있는 노동권 강화 및 보장
- 모든 산업부문에 걸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차별금지, 임금과 노동시간의 기준이 보장 강화 및 감독
- 무역에 있어 노동과 환경 보호의 기준 도입. 이를 통해
 - 일자리와 공해의 해외이전 방지
 - 미국내 제조업 촉진
- 공공소유 토지, 물, 바다의 보존과 강제적 토지수용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장
- 원주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대해 이들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이들과의 모든 협약 존중하는 한편 이들의 주권과 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감독
- 국내외 독점 혹은 초국적 기업의 지배와 불공평한 경쟁으로부터 모든 사업자들 보호
- 모든 미국인들에게 다음을 보장:
 - 양질의 의료혜택
 - 안전하고 적절하며 값싼(affordable) 주거
 - 경제적 안정성
 - 깨끗한 물과 공기, 건강하고 값싼 먹거리, 자연에 대한 접근

(▶ 정책추진의 전제조건 15개 중 13이 노동자, 원주민, 최전선 커뮤니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강화하는 규정)

[별첨 2]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버니 샌더스의 그린뉴딜 정책 (핵심 정책 요약)

- 2030년까지 전기와 교통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및 2050년까지 완전한 탈탄소화
- 20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통해 무실업 사회로 진입
- 정부의 직접 공공투자 16.3조 달러(한화 약 2경원)
- 5년의 실업보험, 직업전환 임금 보장, 주거지원, 직업교육, 의료, 연금 지원, 새로운 일자리 제공 등 노동자들의 공정한 전환
- 기후위기 국가긴급사태 선포
- 단열 등 통해 전기료 인하, 공공교통 강화, 전기차로 트레이드인 지원, 고속인터넷 제공 등 인프라 재건 통한 생활비 감축
- 재생가능하고 생태친화적인 농업에 대한 투자 통해 소규모 가족 농장 지원
- 빈곤층, 원주민,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기후위기의 영향에 가장 노출된 기후위기 최전선 커뮤니티(frontline communities)의 정의 구현
- 녹색기후펀드 설립,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등 통해 전세계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
- 국내 목표 달성과 발전도상국 지원 통해 전지구적 탄소배출 저감 목표 초과 달성
-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위한 R&D 대규모 투자
- 기후정의운동 확장 및 주변화된 사회집단들을 운동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지원과
- 환경보존과 공공토지에 대한 투자

[별첨 3] 영국 노동당 그린뉴딜 그룹의 그린뉴딜 정책 (핵심 정책 요약)

- 2030년까지 탄소 제로배출
- 단기간 내 화석연료사용 폐지
- 재생에너지에 대규모 투자
- 노조가 보장된 고임금 녹색 일자리로의 정의로운 이행
- 공공적이고 민주적인 소유의 확대
- 통합적 녹색 공공교통
- 발전도상국들의 기후전환 지원

- 모두에게 보편 서비스 제공함을 통해 기본권 보장
- 이미 생긴 기후 난민을 받아들이고 더이상 기후 난민 생기지 않게 예방

[별첨 4] 정의당 총선 그린뉴딜 정책 (핵심 정책 요약)

3대 전략

-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의 획기적 방향전환
- 혁신가형 국가로 국가역할 혁신
- 동아시아 그린동맹 구축

10대 과제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비중 40%로 확대
- 2030년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
- 충전문제 해결위해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 인프라 “코리아 차저” 프로젝트
-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 통해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 증대
-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 순환경제 산업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를 녹색혁신 연구개발에 투자
- 기존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탈탄소 산업과 농업 육성
-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통해 전환시 어려움 겪게 될 노동자, 중소기업, 지역경제에 대한 집중적 지원 대책
- 매년 GDP의 1-3%의 녹색투자재원 마련 + 투자전략 수립
-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입법화 및 초당적 국회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구성

[별첨 5] 녹색당 총선 그린뉴딜 정책 (핵심 정책 요약)

기후위기 비상체제로 국정목표 전환

- 국가기후비상사태 선언 - 2050 배출 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 탄소예산, 탄소영향평가제도 전면 도입,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 기후비상시민의회 구성, 탄소세 도입, 토건 예산 감축, 그린뉴딜 기금 마련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

- 전환기 기본소득,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구성, 고용전환 지원

- 폭염과 한파에 안전한 인프라와 그린 리모델링, 불평등 잡는 3주택 소유금지
- 식량자급률 100%를 위한 탄탄한 농촌사회 - 농민기본소득, 여성농민 지원, 채식과 비거니즘 확대

탈탄소 순환경제로의 산업전환

-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 전환 - 에너지 요금과 세제 개편으로 에너지 수요 50% 저감, 재생에너지 100% 달성, 2030 탈핵, 탈석탄
- 교통량 줄이는 도시계획, 대중교통완전공영제, 2025년 전기 버스 100% 전환, 2028년 내연기관차량 생산 및 판매 금지
- 순환경제 구축 - 산업 전 주기 탈탄소화와 재사용 인프라 구축
- 남북 공동 그린뉴딜 플랜 - 탈탄소 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별첨 6] 더불어민주당 총선 그린뉴딜 정책 (핵심 정책 요약)

탄소제로사회 그린뉴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약속

-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및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 산업혁신 추진
-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
-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세제 등 지원 강화
-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과 에너지 분권체계 구축
- 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10\mu\text{g}/\text{m}^3$)으로 40% 이상 감축

[별첨 7] 기후위기비상행동 26대 세부정책안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2019년의 3대 요구사항에 더해서, 2020년 총선 시기에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질의할 26대 부문 요구사항을 정리하였다. 이 요구사항은 비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하고 집행위원회(정책언론팀)가 추가 정리해서 만든 안을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의결한 것이다.

■ 1.5도 목표에 따른 탄소예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 2030년 50%이상 온실가스감축 (2010년 대비), 2050년 이전 탄소배출제로 달성

- 지구온도 상승 1.5도 제한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류가 사용가능한 탄소예산이 정해져

있음. IPCC에 따르면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이상 감축,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함. 세계 7위 규모인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모와 기후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한국은 탄소예산에 기반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2030년 50%이상(2010년 대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50년 이전까지 탄소배출제로를 목표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특히 검증되지 않은 탄소 저감기술과의 타협의 여지가 있는 '순제로(net zero)'가 아닌 '배출제로'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목표시점은 2050년 이전이어야 함.

■ 정부 정책과 예산 수립에 있어서 기후영향평가 전면 도입

- 공공부문의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기후위기 대응의 목표에 부합한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이 이용할 수 있는 총 탄소예산을 설정하고, 기간/년도별 탄소예산을 할당하여 매년 관리해가는 탄소예산제도를 수립해야 함. (영국의 탄소예산제도를 참고) 정부 각 부처는 정책 및 예산을 수립할 때, 사용하게 될 탄소예산을 고려해야 결정하도록 함. (예컨대 신공항의 신설로 추가적인 탄소예산 소비가 필요한지 평가해야 함.)

■ 기후위기로 피해를 받는 이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정책 수립. 기후위기로부터 효과적인 보호와 구제를 받을 권리 보장

- 기후위기는 특별히 농민, 노동자, 여성, 장애인, 청소년과 같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옴. 기후위기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음. 기후정책 수립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이들이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고 효과적인 보호와 피해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함. 석탄발전, 자동차 산업 등의 에너지전환과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주체로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폭염으로부터 야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중지권 법제화와 같이 기후위기 취약층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마련하고 함.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 석탄발전소 대규모 증설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 등 기존 에너지 정책은 기후 및 대기 정책과 연계되지 않고 '값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만을 우선시함.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상위 목표로 추구하면서 에너지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상충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기후와 에너지 정책 부문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서,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물, 교통, 농업, 노동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 부처의 협력을 이끌기 위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하여야 함(녹색성장위원회 폐지 이후 신설).

■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조세 및 재원확보방안 마련

-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부담원칙에 따른 재정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탈탄소사회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 투자가 필요함. 이를 위한 신규재원 확보와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조세 신설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탄소세, 화석연료 기업 과세, 부유세 등의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음.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재정을 확보하는 조세를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해야 함. 이때 그 과세 부담을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로 이익을 얻는 기업이 책임지도록 해야 함. 또한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조세 및 부담금에 의한 재정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통해서 조성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의 전환은 필수적이며, 지방정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개발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재원 역시 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음.

■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탈석탄로드맵 마련과 국내외 석탄금융지원 중단,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 기반의 분석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함. 한국도 1.5도 목표에 부합하도록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최대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함. 공적금융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직간접적 보조금을 즉각 폐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탈석탄 전환과정에서 노동자 참여와 고용보장이 필요함.

■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100% 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한 전환과 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공공성확보,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 생태계 조화 보장

- 정부는 현재 전력부문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2030년 20%, 2040년 30~35%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이는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35%가량인 전력부문만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이고, 이러한 정부 목표는 1.5도 제한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매우 미흡한 수치임.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와 달리 한국은 장래에도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에너지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정책에 머물러있음. 이제는 10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국가 비전으로 채택해야 함. 또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는 석탄발전이 전력의 40%를 담당하므로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는 설비용량으로는 퇴출되는 석탄발전의 3~4배 이므로, 제한된 국토에서 짧은 기간에 주민 참여 및 이익 공유, 생태계 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 국가의 계획 개발이 필수적임. 대규모는 국가가 부지, 송전선로를 계

확하고 민간이 건설 운영하며, 중소기업은, 지역분산적으로 그리고 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배출제로 달성을 위한 과감한 에너지 소비 감축

- 기존의 과도한 에너지소비를 그대로 둔채,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만 전환한다고 해서 배출제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음.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대중교통 중심의 수송을 위한 국토계획, 도시계획이 필요. 건물 용도 별 연간 에너지 사용량 규제를 도입하며, 특히 에너지 가격에 에너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을 부과하며, 높아진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 소비절약에 선순환으로 작용하게 함. 특히 노동시간 단축 및 철야노동 규제 등은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적 공정 개선과 함께 중요한 에너지 소비 감축 전략이 될 것임.

■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요금 전면개편

- 에너지 사용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되, 온실가스 비용을 국제가격에 맞추어 관리해야 함. 전기는 1차에너지의 변환으로 생산되는 사용하기 편리한 고급에너지임. 전기요금은 전력의 생산자, 송배전사업자, 판매사업자의 투자와 이익이 실현되어야 지속가능하며, 선진국처럼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세금, 부과금 등이 추가되어야 함. 에너지전환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의 투명성이 관건이며, 전기요금의 원가 공개는 에너지비용의 투명성 확보의 첫 걸음임.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함. 또한 전력기반기금 개혁 등을 통한 에너지전환 비용 추가 마련이 필요함. 한편 요금 현실화가 저소득계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사용량에 대한 할인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기본 사용량에 해당하는 현금을 별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 에너지 비용은 생산자, 중간자(유통), 소비자 간의 균형 분배가 중요. 소비절약을 위해 다소비자에 대한 누진적 요금제 적용이 필요함.

■ 과학에 기반한 감축목표와 수단이 수립되어야 하며, 1.5도시 목표에 부합하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 노동자가 주도하는 정의로운전환위원회를 통해 탈탄소 산업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함. 이 과정에서 고용과 소득, 전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노조할 권리를 포함한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기후관련 이슈를 단협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해야 함.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자동차 부문 등의 녹색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과 판매 금지 시한 설정, 친환경 자동차 생산 전환,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전환

-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국 전체의 13.9%(2017년 현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대부분이 내연기관차의 이용에 의한 것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세계 각국은 이르면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주요한 내연기관차 생산국가로서 이에 영향을 받을 것임. 온실가스 감축과 세계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로 전환을 이뤄야 함. 따라서 내연기관차량의 생산과 판매 금지의 시한을 정해서 자동차 산업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철강, 석유화학 등의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탈탄소 공정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편해야 함. 이러한 산업 전환과정에서 노동자 참여와 고용보장이 필요함.

■ 식량자급률 2040년까지 70% 확보 계획 수립과 이행

- 기후변화는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서 주요 식량의 일정한 자급률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또한 식량 자급률 상승은 한국의 조건에서 자연스럽게 로컬푸드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업 생산과 유통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며, 농업 인구 확대와 농촌 살리기 효과도 거둘 수 있음. 주요 선진국들은 식량이든 곡물이든 자급률을 60% 이상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식량자급률 48.9%, 곡물자급률 기준으로는 23.4%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 목표와 정책의지를 담은 상향 계획도 없는 형편임.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2040년까지 곡물자급률 기준 50%, 식량자급률 기준 70%를 1차 목표로 수립하고 시행,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유기농 생태농업 지원 확대

-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저조한 반면에 농약 사용량은 호주와 캐나다에 비해 10배나 많고, 비료 사용량도 캐나다의 3.4배, 미국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반생태적 관행농업이 주를 이루게 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농법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질소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킴. 현재 친환경 인증과 부분적 지원에 그치고 있는 생태농업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논농업의 전면 유기농 전환, 기본품목의 친환경재배 확대와 공공수매제 실시, 생태환경에 기여하는 공익형직불제 확대 개편 등을 추진하여야 함.

■ 기후위기와 식량자급에 대응하는 축산정책 전환

- 한국의 축산업은 2000년 수입자유화 이후 종사 가구수로 1/3 수준인 11만 2천 가구(2017년) 수준으로 감소했고, 반면에 농가당 사육 마리수는 증가함. 기후위기와 식량자급과 관련한 미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축산정책은 축산물 안전관리와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 국민의 육류 소비 감소와 함께 축산물 생산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

출을 줄이며, 지역단위 경축순환농업 실현과 사육 동물의 복지를 향상하면서 축산농가도 상생할 수 있도록, 질서있는 규모 축소와 전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지역먹거리 이용 확대와 채식권 보장 확대

-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친환경농업과 지역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지역먹거리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IPCC의 토지특별보고서 등은 육류 위주의 음식섭취가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지적함. 육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축산업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변화가 기후변화를 가속화함.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식생활 교육과 건강한 저탄소 식단을 확대하고, 공공급식에서부터 채식권을 보장함으로써 채식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해외의 경우처럼 학교와 공공급식소에서 주1일 채식급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과 교통에너지 전환 추진

- 교통 부문의 전환은 내연기관을 폐기하는 것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공공교통전략을 통해서 가능함. 이를 위해 전기차 등 녹색교통수단을 확대는, 우선 공공교통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전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현재 43%에 머무르고 있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2050년에 80%까지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과 국토교통계획이 새로 수립되어야 함.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 첫째, 현재의 경유차 통행금지를 2025년까지 전면화하는 것은 물론 주요 광역지방정부에 혼잡통행료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면서 해당 재원을 교통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둘째, 버스나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전철 등을 재공영화하여 공공교통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 셋째, 기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재편하여, 무상교통 등 강력한 요금 유인구조와 더불어 전환에 따른 재원을 충당할 필요가 있음

■ 2030년 건물부문 탄소배출 50% 저감, 2050년 건물부문 탄소배출제로, 그린일자리 100만개 기반구축

-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 21%(2017년)에 달함. 해외 대도시에서는 대형빌딩에 대한 강한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녹색건축로드맵에 의해 신축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빌딩을 확산하고 있으나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음.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건물에너지효율에 대한 규제와 공공투자인 건물진단, 시공,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녹색 신규일자리 창출할 것임. 시범사업 수준이 아닌 대규모 물량 시공을 통해 빠르

고 강한 전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탄소감축과 적응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복원

- 산림, 해양, 습지, 도시녹지 등의 생태계는 탄소의 흡수원으로서 기능하며, 아울러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폭염, 가뭄 등)로부터의 안전망과 회복력 확보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유엔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 따르면 난개발, 남획,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800만 종의 생물 중 100만 종이 수십년내에 멸종될 수 있다고 경고함.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상호 긴밀히 연결된 사안임. 따라서 무분별한 개발로부터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적극추진하는 것이 기후변화의 감축과 적응 양 측면에서 필요함. 이를 위해서 2020년 생물다양성협약총회를 통해 제시될 국제적 목표에 맞춰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하여 도시녹지를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기후변화 취약생물종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기후변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평등한 참여 보장

-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위험은 여성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에서도 불평등한 형태로 나타남. 따라서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사결정과정에서 성평등한 참여가 보장(60/40원칙. 어떤 한 성이 60%를 넘거나 4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함)되어야 하며, 기후변화 정책 수립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함.

■ 청소년/비청소년의 기후위기 교육 강화

-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기후교육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원리나 에너지절약 등의 개인 실천에 머물러 있음. 기후위기를 과학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인지하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과 삶의 전환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기후위기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기후관련 활동이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함. 또한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기후교육 여건이 만들어져야 함. 성인 교육의 경우 지역사회 기후문제 해결과 생태공동체성 회복 등을 위해 지역 단위 기후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또한 교육기관의 탈석탄금융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남북 기후 에너지 협력과 기후위기 취약국 지원확대

- 한반도는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 가운데 하나임. 특히 기후위기 대응능력이 부족한 북한에 더 큰 위기로 다가옴. 북한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 농업, 에너지 등 사회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함. 특히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 남북간 상호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 또한 남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앞장서

야 함. 한편 기후재난국가와 기후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이 기여해야함.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기후채무국으로서 한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취약국 및 계층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함.

■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 기후위기는 감염병의 확산, 폭염의 증가 등으로 시민의 건강권에 대해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음. 향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 증가할 것이 예측되고 있음. 따라서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고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대응 인력 등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함.

■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대응정책 수립

- 2019-20년 호주산불에서 보듯,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음. 산불, 홍수, 기상이변, 가뭄, 해수면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기후위기 재난을 고려한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예측과 대응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재난위험과 재난취약성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분야의 사회적책임 투자 원칙 강화와 도입

-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재정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산업의 탈탄소 전환에 있어 자본의 흐름을 결정하는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자본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행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금융 분야의 사회적책임 투자 원칙을 강화해야 함. 이미 해외 공적연금기금의 경우에도 비인도적 투자(대량살상무기 생산 기업 또는 국가 등), 반환경적 투자(석탄 채굴 및 발전 등)에 대해 원천적으로 투자 배제 원칙을 적용하며, 민간 금융기관도 적도 원칙(1천만달러 이상 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환경파괴나 사회갈등을 일으킬 경우 투자 제한)을 자발적으로 채택함. 따라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기금의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민간 금융에 대해서는 자율협약 또는 입법을 통해 ‘한국형 적도원칙’을 도입해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사업 및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의 사전심사를 통해 일차적으로 걸러질 수 있도록 유도함.

■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친 플라스틱의 획기적 감축과 순환경제 구축

- 현 추세대로 플라스틱 생산이 증가한다면, 플라스틱에 유래한 온실가스가 2015년 대비 2050년에 약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플라스틱은 화석연료인 석유에서 기인하며,

생산과 소비 및 폐기의 각 단계마다 탄소가 배출됨.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생산단계에서부터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비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제한을 확대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또한 1회용품과 불필요한 포장재 규제를 확대해야 함. 나아가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쳐 자원낭용 억제와 폐기물 원천감축에 따른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기후변화 정책 수립 시 청년 참여 보장

-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할 시 미래를 더 살아갈 청년을 이해당사자로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함. 현 상황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음.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가 서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귀속되는 부정의(injustice)한 상황임. 청년은 기후위기 시대를 더 살아갈 가장 주요한 이해당사자로서 기후변화 관련 정책 수립시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함. 또한, 그 참여는 단발성 참여가 아닌 지속적 참여로 보장되어야 함.

[노동자의 삶을 위한 그린뉴딜]

민주노총 부위원장 양동규

1. 코로나 위기를 보며 기후위기 상황을 예감함

○ 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의 유사성

- 한국노동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4월 취업자 감소는 102만 명으로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5만 명 감소는 물론 IMF 위기 첫 두 달 취업자 감소 92만 명보다 더 큰 숫자. 일시휴직자 약 150여만 명 합치면 약 250만 명이 일자리 없는 상태
-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 ‘기업구조 긴급자금’ 100조 등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30대 재벌기업 사내보유금은 957조(전년대비 7조 2천억 증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3-4월 두 달 동안 직원 만 명 감축 + 법인세/상속세 등 각종 세금 인하,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코로나19 위기보다 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비상상황에서 노동자 배제의 에너지 전환 상황이 도래할 경우, 대량해고사태로 재난소득으로 연명하는 잡리스 빈곤층 형성, 기후위기 계도 우려

2. 기후위기와 노동자가 참여하는 그린뉴딜

○ 척박한 노동현실에서 기후위기대응은 후순위로 밀림

- : OECD 평균 이하의 노동기본권, 최악의 ILO 기본협약 미비준국(노동권 악당국가?)
- : 최악의 노동유연성 - 만연한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 파견노동
- : OECD 최대 산재사망(년 2,400명-위험의 외주화)
- : OECD 최장시간 노동(2,113시간)
(미국 1790시간, OECD평균 1766시간, 일본 1719시간, 독일 1371시간)
- : 최악의 청년고용 - 상위 10대 재벌 자산총액 GDP 80% → 고용인원 94만 명(3.5%)

- 노동자들의 삶과 밀접한 기후위기, 왜 노동자는 무관심한가!
- : 전문가 주도의 운동, 어려운 용어.
- : 고용과 생존권은 부차적 지위로 규정하는 기후 담론 ⇒ 노동자 참여 저해

○ 탈탄소 산업 전환에 따른 노동자 피해 예상

- 발전 5사 노동자 : 약 12,000명(1개사 당 2,300명),(정규직 규모만큼 비정규직 노동자 존재)
 - 자동차산업: 전기자동차로 전환 과정에서 1/3 수준의 일자리 축소 예측
 - 조선 산업의 사례 및 두산중공업 사태가 보여주는 전환의 어려움
 - 특히 노동기본권 없는 비정규직의 경우 저항하지도 못하고 배제될 위험성
- ⇒ '탈탄소 전환'만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이유

○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노동운동의 결합

▲ 민주노총 및 산별노조의 활동

- 기후위기비상행동 출범부터 참가 단체 등록, 2019년 9. 21 기후행동 조직적 참여
- '민주노총 기후위기 대응 네트워크' 구성 가동
- 문재인정부의 2017년 탈탄소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대한 발전노조 지지성명
: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알기에 수명 다한 노후 발전소 가동 중단을 애써 환영"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와 사회공공연구원 통한 방안 모색 노력
-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주최 토론회(5.28): '포스트코로나 시대 어떤 뉴딜이 필요한가'

<공공운수노조>

- ① 2019년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 중집 및 간부교육
- ② 2020년 사회공공연구원과 기후위기-정의로운 전환 관련 연구사업 체결
- ③ 6월 하순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워크숍 진행 예정

<금속노조>

- ① 전기차 전환 대응사업, 연구와 교육
- ② 기후위기 간부교육, 기후위기 영상교육자료 제작 배포

<사무금융노조>

- 지난 2월 열렸던 대의원 대회를 통해 사회책임투자원칙에 기반한 “녹색금융 실현을 위한 투자모니터링 및 녹색단체협약 쟁취” 목표 합의

3. 체제전환을 향한 그린뉴딜

- 경기부양과 민간기업 투자 위주의 그린뉴딜이 아닌 공공적 소유, 공공 투자 근간
 -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조합 조직화 전제
 - 개발도상국, 취약계층 지원으로 국제주의, 불평등 해결 지향
 - 자본의 이윤 보장, 더 많은 생산-소비를 추구하는 성장주의 폐기
- 기후위기는 자본의 무한 이윤 추구의 결과물, 따라서 기후위기 극복은 단지 인류의 지속성 보장만이 아니라, 경제사회체제 전환, 불평등 해소를 통한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전환으로 이어져야 함. 이 점에서 기후위기대응은 노동운동의 핵심의제가 되어야 할 필요성

○ 민주노총의 이후 계획

- 아직 미약하지만 민주노총은 고용, 노동시장, 비정규직, 임금과 관련한 기후위기의 영향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진행하여, 노동자와 정부, 사업주, 시민사회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함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녹색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과 소득, 전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노조할 권리를 포함한 노동권이 보장되며, 기후 관련 이슈를 단협 의제로 만드는 탈탄소 산업전환계획을 진행할 것임
- 민주노총 하반기 구상
 - : 기후위기대응 네트워크 활동 결과물 ⇒ 교육선전, 토론 조직화
 -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 “기후위기와 민주노총의 대응” 보고 ⇒ 전조직적 사업화
 - : 올해 말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시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 핵심 의제화

‘코로나 19’ 와 ‘기후’ 재난 시대, 어떤 그린 뉴딜이 필요한가 -농업, 농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

기후위기 농업먹거리 모임

■ 문제의식

○ 2015년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된 이후 온실가스배출에 관한 국가의 책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 전략의 부실함은 농업-먹거리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음.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과 먹거리 접근권을 보장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후위기 문제는 먹거리와 무관하게 인식되어 왔음

○ 2020년 1월부터 발생, 확산된 코비드 19(코로나-바이러스 질병 2019)은 국내외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급작스럽게 발발하였음. 국경과 영역을 넘나드는 이 전지구적 재난은 새로운 질서, 경제·사회적 전환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의 목소리와 그 결이 동일함.

○ 생명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영역인 먹거리는 기후위기와 코비드 19 재난 극복을 위해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무엇을 보상 또는 보장할 것인지’ 중심으로 흘러왔음. 이는 국가의 대응책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틀 속에서 기업과 상인을 비상 지원·구제하거나 공공급식 영역에 대한 긴급 대책 중심으로만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임. 전지구적 기후위기와 질병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전면적인 대안으로 ‘그린 뉴딜’을 제안한다면, 먹거리를 위한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상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 기후위기-코비드 19의 맥락에서 먹거리-농업 체계 진단

○ 기후위기는 농민들의 생산활동에서 가뭄, 홍수, 이상기온, 냉해 등을 통해 점점 심각하게 감지되어 왔음. 특정 품목의 생산한계선이 변동되고 열대성 먹거리 생산이 증가, 한류성 어류의 어획량 감소 등.

○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2011-2020에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35%(BAU 대비)를 목표로 농업, 어업, 임업, 축산 분야에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매우 소극적인

정책으로 그 이행 평가가 부족함은 물론 코비드 19에 직면한 전지구적 재난 시대에 더욱 적극적이며 생산과 소비 주체 모두의 참여 속에 이루어질 정책 제시가 필요

○ 코비드 19는 국경과 영역을 넘나들며 모든 이들의 삶을 침투, 국가 체계에 비상이 작동되었으며, 국가 간 또는 개인 간 물리적 경계를 강화하는 봉쇄 정책으로 경제 위축과 실업이 대량 발생하고 있음. 과거 국제사회에서 농업은 기후변화나 동물 질병이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제는 전지구적인 대규모 경제적 제한조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는 고립된 채 국가가 자체적으로 해결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먹거리 체계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생산물과 노동 모두) 한국은 먹거리 수급의 불안정성과 농촌 이주노동자와 농민이 동시에 직면한 어려움이 부상하고 있음. 전반적인 경제 위축으로 먹거리 가격은 하락하여 농민들은 밭을 갈아엎고 있고, 시장의 먹거리 가격은 높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은 줄지 않고 있음. 재난긴급지원금이나 농민수당(지역화폐로 지급)은 도시는 물론 농촌에서도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의 생활력과 생산력을 강화시키지 못함.

○ 농업-농민 분야의 현안으로 보이는 공익형 직불제, 농산물 가격보장, 농지문제 등에서 기후위기와 코비드 19 재난 극복을 위한 먹거리 체계 전환의 필요성과 이를 실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는 못함.

■ 먹거리 체계의 정의로운 전환과 ‘먹거리 그린 뉴딜’

○ 기후위기와 코비드 19에 대응할 새로운 사회질서가 요구됨에도 중앙정부의 ‘그린 뉴딜’에는 종합적인 먹거리 체계에 대한 고민이 전무함.

○ 먹거리의 생산은 기후위기와 지구적 질병으로 인한 재난 모두에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생산방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먹거리 자급률을 높여야 함. 농업 생산과 유통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 주요 선진국들은 식량이든 곡물이든 자급률을 60% 이상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식량자급률 48.9%, 곡물자급률 기준으로는 23.4%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 목표와 정책의지를 담은 상향 계획도 없는 형편임.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2040년까지 곡물자급률 기준 50%, 식량자급률 기준 70%를 1차 목표로 수립하고 시행, 점검할 필요가 있음. 먹거리 자급률은 단순한 생산량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농민-소비자-노동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결정하는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식량주권’의 의미임.

○ 건강한 먹거리가 건강한 생활의 바탕이 되는 만큼 의료방역체계 구축에 대응하는 건강한 먹거리-건강한 삶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저조한 반면에 농약 사용량은

호주와 캐나다에 비해 10배나 많고, 비료 사용량도 캐나다의 3.4배, 미국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반생태적 관행농업이 주를 이루게 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농법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질소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킴. 현재 친환경 인증과 부분적 지원에 그치고 있는 생태농업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논농업의 전면 유기농 전환, 기본품목의 친환경재배 확대와 공공수매제 실시, 생태환경에 기여하는 공익형직불제 확대 개편 등을 추진하여야 함. 특히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먹거리 공공성은 강화되어야 함.

○ 기후위기와 코비드 19 맥락에서 가장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분야는 축산업. 한국의 축산업은 2000년 수입자유화 이후 종사 가구수로 1/3 수준인 11만 2천 가구(2017년) 수준으로 감소했고, 반면에 농가당 사육 마리수는 증가함. 기후위기와 식량자급과 관련한 미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축산정책은 축산물 안전관리와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 육류 소비 감소와 함께 축산물 생산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지역단위 경축순환농업 실현과 사육 동물의 복지를 향상하면서 축산농가도 상생할 수 있도록, 질서있는 규모 축소와 전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심각하게 지속되어 온 도시 인구 과밀 또한 시대적 전환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임. 농촌지역으로 인구 분산을 위해 농촌지역공동체를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문화적으로 회복시키고 활성화하여 청년, 노년의 실업이 건강한 공동체 기반의 먹거리 생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먹거리 체계는 자본 또는 노동을 기반으로 성장해야 할 산업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모든 사람들의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으로써 ‘먹거리 그린 뉴딜’이 될 수 있음. 중앙정부는 스마트 팜을 확산하여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촌기본소득 및 농생태 환경 조성을 통해 농촌지역공동체를 회복시켜 인구 분산은 물론 건강하고 정의로운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 기후위기 농업-먹거리 모임

참여단체: 농민의 길, 한살림,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햇빛학교

참여개인: 오지혁, 박동범(공공노조 전국대학원생 노조지부), 민정희, 유명섭·김태열(한살림연합), 한혁준(한살림생산자연협회), 이재욱, 임송택, 최동근, 김오열, 유경순, 김민정, 김태열, 이지훈

여성의 삶을 위한 그린 뉴딜

이안소영_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재난은 차별과 불평등을 재생산 심화한다

5월 26일 현재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5,521,927명이고 사망자는 348,395명이다. 한국 확진자는 11,206명 사망자는 267명이다. 5월 24일자 뉴욕타임즈는 사진이나 그래픽 없이 코로나로 죽어 간 천 명의 부고로 신문 1면을 채웠다. '유쾌한 미소를 띤 너그러운 청년' '학교 버스를 운전하며 진짜 천직을 찾은 사람' '밤낮없이 코로나 환자를 돌보던 헌신적인 간호사'. 코로나 통계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다. 게다가 이번 팬데믹이 마지막이 아니며, 각종 감염병과 자연 재난과 사회적 참사, 그리고 사회 경제 위기가 더 짧은 주기로 반복되고 악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 생명다움을 보장받지 못하는 공장형 축산업,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과잉생산-소비사회 고속성장 시스템이 그 원인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코로나19 속에서 어렵게 자리 잡아갔던 플라스틱프리 운동과 1회용품 사용 규제책이 완화되고, 화학물질이나 항균제 사용이 증가하는 등 위생/보건 이슈와 환경문제가 부딪치는 형국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원인을 찾아 사회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극심하게 침체된 고용과 경제를 회복시키는 '경제방역'과 '비대면 산업' '규제완화'를 화두로 '한국형 뉴딜'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린뉴딜을 언급하긴 했지만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데이터, 미래차, '원격의료'나 '원격교육' 등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우리가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재난상황과 회복해야 할 '일상'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전환과 대안을 만들어야 할까.

재난은 차별을 심화시킨다. 누구라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 기후위기와 각종 악재발과 화학사고가 그런 것처럼 코로나19는 한국사회의 차별과 배제, 불평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젠더와 관련하여 드러난 대표적인 코로나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여성 일자리

- 요양보호사, 급식, 청소, 서비스,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업 등 분야에서 일시 휴직자 증가, 3월 일시휴직자 중 98만9천명 중 여성이 66.7% 차지

- 취업자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직종은 여성 서비스직(9만5천명), 여성 전문가 및 관련직(8만명), 여성 판매직(5만6천명), 남성 서비스직(5만5천명), 남성 사무직(5만4천명), 여성 생산직(3만3천명) 순으로 나타남. *고용통계동향 자료: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한 젠더적 고찰” (신경아 2020)에서 재인용.
- 간호사,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사 등 안전하지 못한 돌봄노동자의 지위 또한 명백히 드러남

○ 돌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가부장제 성별분업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데이케어, 요양원, 방문보호 등 가까스로 마련된 사회적 돌봄체계는 마비상태임.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은 매우 제한적이고 가족 내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 대책 없이 가족 중 특히 여성에게 책임과 부담으로 가중됨.
- 노약자, 어린이, 환자, 장애에 대한 실질적인 돌봄 제공과 함께 걱정과 염려 등 감정노동, 개인 위생과 집안 관리 등 관리 노동, 병원과 학원 등 방문과 이동과 연결을 위한 수많은 그림자노동 산재(자기돌봄, 가족돌봄, 시장구매, 자원봉사, 사회서비스 등)
- 돌봄노동과 여성의 가치를 폄하하는 불평등한 성별분업 체계를 고스란히 드러냄.

- **코로나 봉쇄로 가정폭력 증가:** 가정폭력, 성폭력, 이혼 증가. 대전시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가량 증가(대전MBC, 5월 18일자). 아르헨티나 여성단체 최근 두 달 동안 성폭행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여성살해사건이 50건 이상 발생 보고(연합뉴스, 5월 19일자) 개별 도시나 국가에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 크고, 이후 조사와 통계자료 필요.

- **세대주-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재난지원금을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기본 단위로 하여 세대주에게 지급. 대부분 남성이 세대주인 상황에서 여성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도 남성의 관리와 통제 하에 놓임. 가정폭력 피해자, 이혼, 불화인 관계에 놓인 세대 구성원은 국가가 제공하는 긴급 재정지원의 수혜자가 되지 못함(비세대원의 경우 위임증 필요).

- **성소수자 차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 보도로 드러난 차별과 배제, 아웃팅과 성소수자 안전 확보 불가능 문제

-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배제:** 급변하는 코로나 안전 정보 습득과 시스템 적응의 어려움,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차별적 제공, 재난지원금 차별 및 제외 등

그린 뉴딜: 못생명과 돌봄 가치가 전면화되는 사회 전환

코로나19는 한국사회에 내재한 불평등과 사회안전망에 포괄되지 못하는 취약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고통스럽게 드러냈다. ‘포스트 코로나’는 생태위기와 소비자본주의 폐해가 주는 경고를 넘어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의 ‘뉴 노멀’

의 내용, 국가와 사회가 자원과 인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재구성해야 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의 패러다임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 여성에게 재난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여성의 가치와 노동을 비생산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저평가하고 폄하하기 때문이다. 재난 상황에서 젠더 폭력과 배제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임금노동중심사회가 아니라 돌봄중심사회로, 상품생산이 아니라 생명의 유지 창조가 중심인 사회로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생명과 생태계를 돌보는 노동의 가치가 전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모든 사회 구성원과 국가가 이를 목표로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재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산업이 아니라 못 생명의 일상을 살려야 하고,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써야 한다. 그럴 때 못 생명과 인간이 공멸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다. 떠오르는 몇 가지 제안이다.

- 사회보험이 포용하지 못하는 많은 일시/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과 공사영역을 불문하고 여성들이 부담해 온 돌봄문제를 해결해야 함. 자녀의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부모 병수발,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이나 생활동반자 케어 등 수많은 돌봄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하는 양육자들에게 ‘불성실함과 비생산한’ 노동자라는 낙인없이 유급 돌봄휴가 사용 가능해야.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필요
- 8시간 근무제는 전업주부 여성을 전제로 한 남성 생계부자양 노동자 모델. 여성이 공적 영역의 참여를 활성화할 뿐 아니라 남성이 임금노동자로뿐 아니라 돌봄 노동자로서 역할 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 만들어야. 전사회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각자의 몫의 돌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관련하여 ‘돌보는 자’로서의 시민권의 재정의, 재구성 필요. 연동하여 기본소득제 등의 논의도 필요
- 가족중심 사회보장제도는 전면 수정되어야. 다양한 형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 단위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 중앙 집중화되지 않은 생존과 일상유지 시스템 확보: 채식과 로컬 푸드, 이동과 수송을 줄이는 지역과 동네형 일자리 확대, 자원순환 경제와 돌봄을 향상시키는 일자리(1회용품 설거지, 재래시장 장바구니 대여, 1인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를 위한 생활응원사업, 공동주택 관리와 기획자, 물건과 집의 수리와 재생을 위한 다양한 주민 플랫폼 등 리빙랩 실험 등)
- 기후위기와 코로나 등 전염병과 개발 피해가 집중되는 집단에 대한 실태파악과 통계 생산(특히 성별통계 부재)과 이를 예방할 정책 마련. 여성의 재난역량강화와 포스트 코로나 기획에 참여 보장책
- 국가 재정을 생태계와 생명을 돌보는 노동에 투자하도록 요구하고 감시해야(도시 디자인, 국방비, 사회기반시설과 개발원조의 재배치, 에너지전환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 탈성장과 규모 줄이기: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잠시 멈춤'의 화두를 포스트 코로나에도 사회 담론과 정책으로 만들기

덧붙이며

무척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으로 코로나 이후 젠더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여성환경단체로서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재설계하고 대안을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다만 '몸은 사회를 기록'하고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는 차별과 불평등을 타고 더욱 심각해짐을 확인하는 요즘, 우리는 어떻게 '전통적인' 여성/환경 이슈를 넘어선 젠더와 노동, 갖가지 차별을 가로지르며 사회경제적 대안과 전환을 만들고 생태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기획하는 데 데 힘을 모을까 고민스럽다. 기후재난과 팬데믹 세상에서 어떻게 못생명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관계성'과 '연결성'을 확인하고 실현하는 게 가능할까. 비대면접촉-언택트가 아니라 다른 규모와 방식의 연결이 필요하다. 얼굴이 보이는 작은 규모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에너지와 자원을 줄이고, 생태계 파괴를 막는다. 동네와 지역에 기반한 소박한 삶은 공동체와 관계성이 기본 생존의 틀이어야 한다. 재난이 다양한 불평등 기제를 통과하며 차별로 드러날 때, 다른 사회운동 그룹과 연대 성명이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날까. 운동단체로서 전문성 확보와 함께 보다 통합적인 사회 기획과 실험, 전환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청년의 삶을 위한 그린뉴딜

이두원

● 청년은 복합적인 불평등을 겪는다

청년이란 누구인가? 보통 20~34세까지의 연령층을 통틀어서 청년이라고 한다. 청년도 안에서 다양한 젠더와 계급 혹은 다른 상황에 따라서 범주가 넓다. 탄소발자국과 탄소예산 또한 해외에 얼마나 나가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청년을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고민이 있었지만, 일단 현시대를 함께 사회초년생으로, 혹은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 거라는 점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청년 세대는 부모보다 못사는 최초의 세대다. 과거보다 소득불평등이 커지면서 청년의 소득이 줄어들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청년은 이런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낸다. 또한 현재 청년의 삶의 기반은 국가가 아니라 부모다. 공정한 경쟁은 사라진지 오래다. 부모로부터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매우 다르다. 세습 사회라 불린다.

청년은 또 다른 불평등을 겪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기후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이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평균기온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탄소예산은 현재 시점으로 7년 7개월 남아있다. 이 또한 명확한 수치는 아니다. 얕은 데 덮친 격으로 생계와 기후, 이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지켜나가야 할지 고민해야만 한다. 20대가 청춘이라고들 하는데 20대가 지구가 찌뚱에 빠지기 전에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는 점은 참 씁쓸하다. 내 청춘이 하필 기후위기 시대다.

●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그린뉴딜

그린뉴딜이 무엇일까? 작년에 그린뉴딜이라는 단어를 접했다. 미국의 민주 사회주의자 이주민이자 최연소 하원의원인 AOC가 폴뿌리 기후운동 단체인 선라이즈 무브먼트와 함께 만든 법안이고 대중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적 불평등이 모두 정치 경제적 불평등에서 비롯됐다는 관점을 가지고 폴뿌리 운동을 통해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자는 큰 야망을 가진 정치 담론이다. 그 방법은 완전고용보장, 부유세, 대규모 국제 발행 투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100% 등 아주 급진적인 내용이 있었다.

문제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넣겠다고 한 점은 이 면에서 고무적이다. 아직 네 개 부처에 서면보고 요청만 한 상태라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주위 친구들에게 한국 그린뉴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대부분 '정부에서 말하는 그린뉴딜이 무엇인지 와 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내에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선언이 먼저 없이 물음표만 가득한 그린뉴딜이 등장해버렸다.

● 청년의 삶을 위한 그린뉴딜 제안

아직 정부의 그린뉴딜 세부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평가하긴 어려워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떤 그린뉴딜을 만들었을까 상상해보았다. 청년들이 생계, 기후형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것을 중심 비전으로 가져가는 것을 생각했다.

우선 그린뉴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기후위기 선언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게 지금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현실이 믿기 어렵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 넷제로와 2030 탈석탄을 대통령이 명확하게 선언을 해야 한다. 2055년 탈석탄은 너무 늦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늘리고 기본소득 줘봤자, 기후가 망가지면 소용이 없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논의해야한다. 재생에너지 100%, 경유차와 작별인사, 사회책임투자 원칙 도입,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 등 연구와 실행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그린뉴딜 핵심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할까? 재생에너지와 건축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지금도 매일 산업재해로 사람들이 하루 평균 두 명씩 목숨을 잃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김용균 법에는 김용균이 빠졌다. 법에는 화학과 관련된 산업의 도급만 금지되고 발전과 건축 부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작년 산재사고 사망자 중 건설업 428명, 제조업 206명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또한 인간에게도 안전한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라질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청년이 사회로 나가면 기존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취직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아예 탈탄소 경제로 전환한다면 자신의 일자리가 사라진 취업 시장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사회 진출 전에 대학에서든 고용부의 교육 프로그램에서든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 교육과 대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도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책임을 지닌다. 청년들 또한 정부와 대학에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교육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한다.

그린뉴딜은 주거보장과 함께 가야 한다. 그린뉴딜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한다면, 집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청년이 정말 좁은 원룸에서 월세를 50만원씩 내면서 살아가고 있다. 반면 건물주는 불로소득을 얻고 또 그 돈으로 건물을 짓는다. 15억짜리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청년들이 내는 한 달 월세보다 더 적은 돈을 세금으로 낸다. 지금의 주택 시장은 재산 불평등과 세습을 일으킨다. 이런 주거환경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정말 사는 집으로 생각하게끔 다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임대료 동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과 같은 새로운 정책이 계속해서 논의, 실행되어야 한다.

● 희망이 있을까

기후위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친구들한테 왜 관심이 없는지 물어봤다.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나 하나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바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국가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지 않으니, 나와 내 가족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서로를 먹여 살려야 한다.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당연하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런데 반대로 사회보장 지출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아이러니하다. 현재 국방 예산 50조 원,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800억 원이다. 이것도 아이러니하다.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현재 상황에 처했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다른 사회를 상상하면 먹고사니즘의 희망이 조금이나마 보인다.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를 설계하는 방안이다. 바로 공유경제다. 이때까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시대를 전제하고 삶을 설계했다면 이제는 사회 자체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는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줄이고 개인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제다.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새로운 경제 모델이다. 집도 차도 꼭 소유해야 할까? 질문 던질 수 있다. 평생 한 집을 빌려서 사는 방안도 있다. 전기차 생산이 아니라 자전거 도로 확충을 요구할 수도 있다. 어렸을 때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라온 청년들에게 이 제안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의 승자독식 개인주의 소비사회가 그렇게 편리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경쟁의 끝엔 번아웃과 기후위기가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청년 정치가 등장해야 한다. 세월호 세대로서 기성세대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공부하고, 토론하고, 성찰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청년이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가능한 사회를 설계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정치권에 세게 해야 한다. 지금 청년 불평등 운동 진영과 청년 기후 운동 진영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둘이 손을 잡고 서로 배우고 연대를 시작하면 엄청나게 큰 시너지가 생길 것 같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빨리 나이를 먹는다. 주춤하다가 못한 것들이 많다. 이러다가 7년이 지나가버리면 어떡하지.. 청년의 삶을 위한 그린뉴딜이 정말 무엇일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청년 내에서 더 많은 논의가 촉발되어야 한다.